
복원력

Ⅰ. 금융기관	75
Ⅱ. 대외지급능력	81
Ⅲ. 금융시장인프라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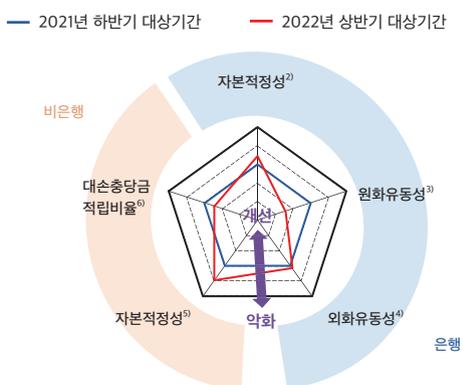
1. 금융기관

일반은행의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였다.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자본적정성 비율은 감독기준을 상당폭 상회하였으며 자금유출에 대한 대응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 비율은 소폭 상승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은 모든 업권에서 자본적정성 비율이 감독기준을 상회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전년말에 비해서는 다소 저하된 모습이다.

향후 각종 금융지원·완화 조치 종료,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그림 I-1).

그림 I-1. 금융기관 복원력 지표 변화 지도¹⁾



주: 1) 2021년 3/4분기말 대비 2022년 1/4분기말(은행 원화유동성, 외화유동성은 22년 4월말)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 2)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
- 3)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4) 외화 LCR
- 5) 비은행 업권별 자본비율을 총자산규모에 따라 가중평균
- 6) 증권회사 제외

자료: 한국은행,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1.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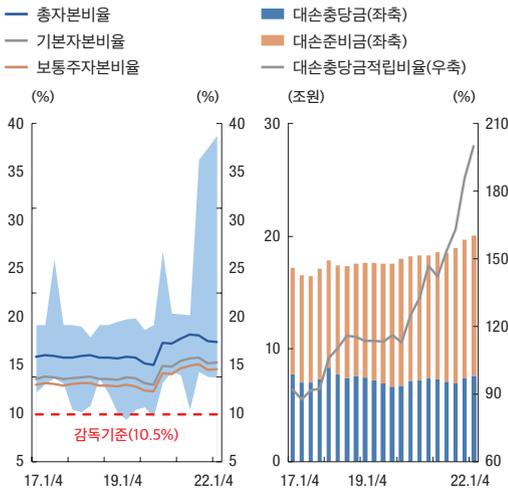
손실흡수능력 강화

일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2022년 1/4분기말 17.35%로 대출증가 등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이 확대된 데다 자본증권 중 자본미인정금액¹⁾의 차감 등으로 전년말(17.41%)보다 0.06%포인트 하락하였다. 다만 보통주자본비율은 14.78%로 전년말 대비 0.11%포인트 상승하였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의 총자본비율이 감독기준(10.5%, D-SIB²⁾ 11.5%, 인터넷전문은행 9.875%)을 크게 상회하였다.

예상손실에 대한 흡수능력을 나타내는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2022년 1/4분기말 199.7%로 전년말(185.5%) 대비 14.29%포인트 상승하였다. 원리금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조치 연장으로 고정이하여신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그림 I-2, 그림 I-3).

- 1) 바젤Ⅱ 하에서 발행된 자본증권 중 바젤Ⅲ 기준 비적격자본증권은 2013년 이후 매년 10%씩 자본인정범위(기타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에서 차감하여 왔다(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2)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로 신한은행(신한지주), 하나은행(하나지주), 국민은행(KB지주), 농협은행(농협지주) 및 우리은행(우리지주)이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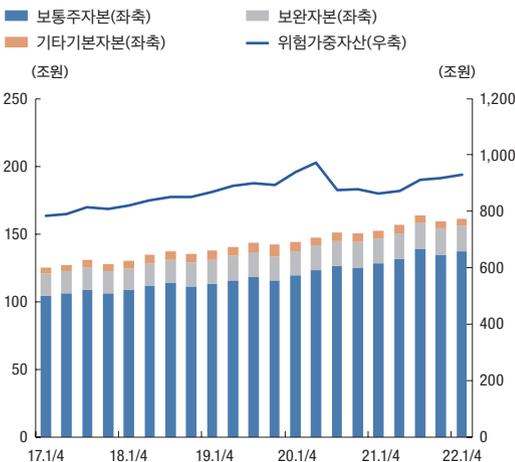
그림 1-2. 일반은행 바젤III 기준 자본비율¹⁾²⁾³⁾⁴⁾ 및 대손충당금적립비율¹⁾²⁾



- 주: 1) 기말 기준
- 2)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고정이하자산. 2016년 3/4분기까지는 대손충당금에 대손준비금 포함, 그 이후에는 보통주자본에 대손준비금 포함
- 3) 감독기준: 보통주자본비율 7%,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 10.5%(D-SIB의 경우 각각 8%, 9.5%, 11.5%)
- 4)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은행별 총자본비율 분포를 나타내며 진한 음영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경우를 나타냄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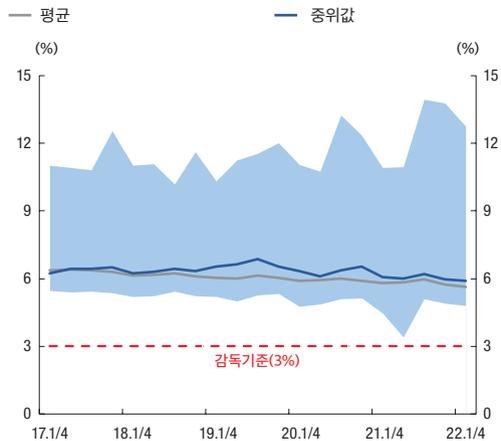
그림 1-3. 자기자본비율 변동요인¹⁾



- 주: 1) 기말 기준
-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일반은행의 레버리지비율³⁾은 대출자산 증가에 따라 총익스포저가 확대되면서 2022년 1/4분기말 5.63%로 전년말(5.75%) 대비 0.11%포인트 하락하였으나, 모든 은행이 감독기준(3%)을 상회하고 있다(그림 1-4).

그림 1-4. 일반은행 레버리지비율¹⁾²⁾



- 주: 1) 기본자본(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총익스포저. 기말 기준
- 2) 음영표시 영역은 은행별 레버리지비율 분포를 나타냄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유동성 대응능력 대체로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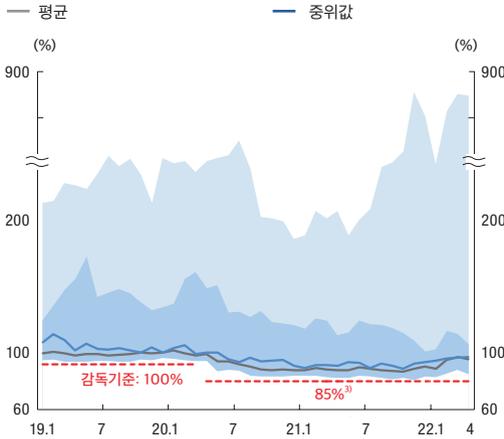
유동성커버리지비율⁴⁾(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은 2022년 4월말 104.6%로 전년말(97.9%) 대비 6.7%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는 LCR 산정 시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미사용분을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⁵⁾한 데 주로 기인한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이 감독기준(100%, 20년 4월~22년 6월중 한시적으로 85%)을 상회하고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 기존 감독기준(100%)을 하회하고 있어 향후 감독기준 환원에 따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나, 환

3) 레버리지비율은 「은행업감독규정」상 단순기본자본비율을 의미하며, 은행부문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유사시 급격한 디레버리징으로 인하여 위기가 증폭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동 비율은 총익스포저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위험가중자산에 기반한 최저자기자본 규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1/4분기부터 보조지표로 공식된 후 2018년부터 동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2020년 1월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적용되었다.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자산 비율을 의미한다.

원 조치가 단계적으로 추진⁶⁾됨에 따라 그 부담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I-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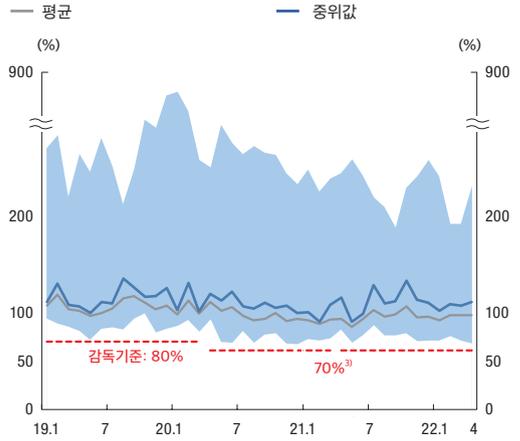
그림 I-5. 일반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¹⁾²⁾



주: 1) 고유동성자산/향후 30일 간 순현금유출액. 월 평균 기준
2)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은행별 LCR 분포이며 진한 음영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경우를 나타냄
3) 2020년 4월~2022년 6월중 한시적 적용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외화 LCR⁷⁾은 2022년 4월말 111.8%로 전년말(110.2%) 대비 1.6%포인트 상승하였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들이 감독기준(80%, 20년 4월~22년 6월중 한시적으로 70%)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6).

그림 I-6. 일반은행 외화 LCR¹⁾²⁾



주: 1) 고유동성 외화자산/향후 30일 간 외화 순현금유출액. 월 평균 기준
2)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은행별 외화 LCR 분포를 나타냄
3) 2020년 4월~2022년 6월중 한시적 적용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장기적 측면에서 은행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⁸⁾(NSFR: Net Stable Funding Ratio)은 2022년 1/4분기말 110.2%로 모든 은행들이 감독기준(100%)을 충족하였다(표 I-1).

표 I-1. 일반은행 NSFR¹⁾²⁾

	2020년				2021년				2022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평균	111.7	111.6	111.1	112.2	111.2	111.7	110.1	111.9	110.2
중위값	111.9	110.1	109.4	110.3	108.2	109.6	106.9	108.2	106.9

주: 1) 가용안정자금조달금액/필요안정자금조달금액. 기말 기준
2) 감독기준은 100%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 5) 은행의 고유동성자산 확보 부담을 완화하여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 2월부터 LCR 산정 시 한국은행에 제공한 차액결제이행 담보 미사용분을 고유동성 자산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6) 금융당국은 은행 통합 LCR 감독기준을 일시에 환원(85% → 100%)할 경우 은행권 및 채권시장 등에 충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3개월 유예(85%, ~22년 6월) 후 분기별로 감독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22년 7~9월 90%, 10~12월 92.5%, 23년 1~3월 95%, 4~6월 97.5%, 7월~ 100%)하기로 결정하였다.
- 7) 외화 LCR은 바젤Ⅲ 규제는 아니지만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실물 부문에 안정적으로 외화를 공급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2017년 1월부터 공식 규제도로 도입되었다. 수출입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및 외화부채 규모가 작은 일부 지방은행(광주은행, 제주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은행에 적용되고 있으며, 감독기준은 2017년 이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2019년 최종 감독기준(일반은행 80%)에 도달하였다. 한편 감독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은행이 보유 중인 고유동성자산을 위기대응과정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외화 LCR 기준을 한시적으로 10%포인트 하향 조정하였다.
- 8) NSFR은 은행이 단기 도매자금조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행태를 제한하기 위하여 장기 운용자산의 일정 부분을 안정적인 부채 및 자본으로 조달하도록 규제한다. NSFR은 2018년 1월부터 국내은행에 도입되었다(인터넷전문은행은 20년부 적용).

대외 외화조달 여건 다소 악화

일반은행의 대외 외화조달 여건은 다소 악화되었다. 장기 외화차입 가산금리는 2022년 3월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증장기 채권투자 수요 감소 등으로 상당폭 상승하였다. 단기 외화차입 가산금리도 소폭 상승하였으나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그림 I-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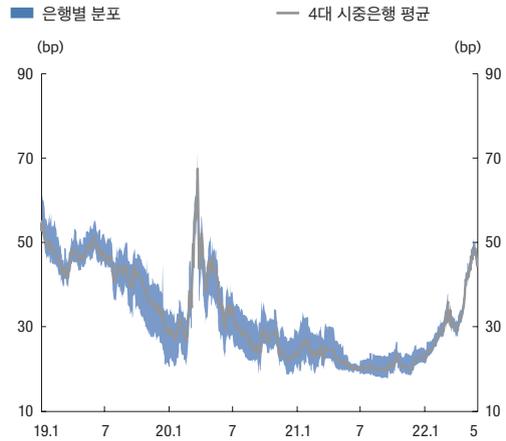
그림 I-7. 대외 외화차입 장·단기 가산금리¹⁾²⁾



주: 1) LIBOR 기준 가산금리(국민, 신한, 우리 및 KEB하나은행의 미 달러화 차입금액 가중평균)
 2) 국내 금융기관간 차입 및 본지점 차입, O/N은 집계대상에서 제외
 3) 장기 가산금리 중 19년 2월, 20년 12월, 21년 5월, 7~9월, 11~12월은 차입실적 부재
 자료: 한국은행

일반은행의 CDS 프리미엄은 장기 외화차입 가산금리와 마찬가지로 상당폭 상승하였다(그림 I-8).

그림 I-8 일반은행¹⁾ CDS 프리미엄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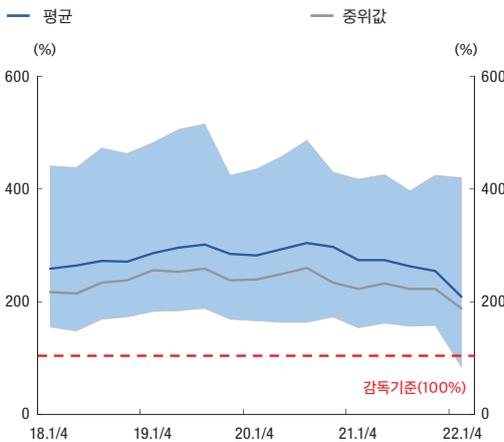
주: 1) 국민, 신한, 우리 및 KEB하나은행 기준
 2) 5년물 기준
 자료: Markit

2. 비은행금융기관

복원력 업권별로 상이

생명보험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위험 기준 자기자본비율⁹⁾(RBC비율)은 2022년 1/4 분기말 208.8%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유가 증권평가손실 등으로 전년말(254.4%)에 비해 45.6%포인트 하락¹⁰⁾하였다.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RBC비율은 감독기준인 100%를 하회하였다(그림 I-9).

그림 I-9. 생명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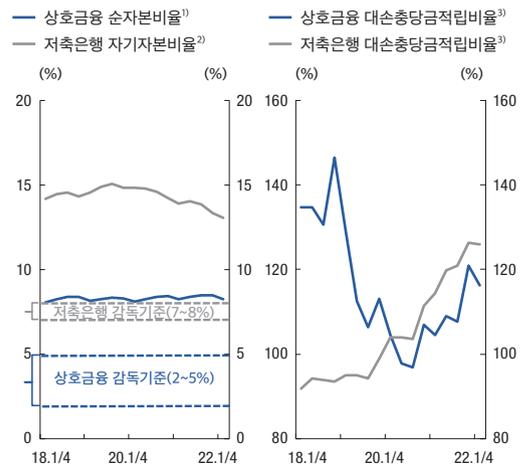
주: 1)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음영은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업체별 RBC비율의 최대치 및 최소치를 표시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상호금융조합의 순자본비율은 2022년 1/4분기말 8.2%를 기록하며 지난해 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2020년 4/4분기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여

2022년 1/4분기말 현재 116.2%를 기록하였다.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2022년 1/4분기말 13.1%로 대출 증가에 따라 전년말 대비 0.2%포인트 하락하였고,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며 2022년 1/4분기말 126.0%를 기록하였다(그림 I-10).

그림 I-10. 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 복원력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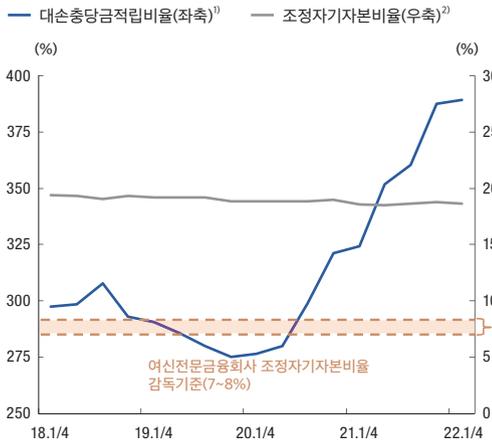


주: 1) 감독기준 2%(새마을금고 4%, 농협 5%)
2)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감독기준 7%(자산 1조원 이상은 8%)
3)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대출채권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22년 1/4분기말 18.6%로 그간의 안정세를 지속한 가운데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고정이하여신 감소 등으로 큰 폭 상승하여 2022년 1/4분기말 현재 389.1%를 기록하였다(그림 I-11).

9)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isk-Based Capital Ratio)은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요구자본은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및 운영위험액 규모를 측정하여 산출된다.
10) 2023년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부채도 시가 평가로 바뀜에 따라 금리 상승시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자본비율의 금리 민감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I-11. 여신전문금융회사 복원력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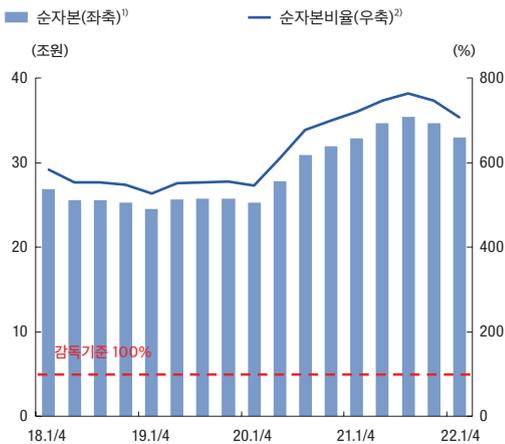
주: 1)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총채권 기준)

2) 조정자기자본/조정총자산, 감독기준 7%(신용카드사 8%)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증권회사의 순자본비율은 2022년 1/4분기말 707.9%로 채권 및 주식 가격 하락에 따른 유가증권평가손실 확대 등으로 2021년 4/4분기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그림 I-12).

그림 I-12. 증권회사 복원력 지표



주: 1)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

2)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필요유지자기자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비은행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대체로 감독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이나,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자본비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는 시가평가 대상 보유 증권이 많아 채권 및 주식 가격 하락시 유가증권평가손실로 인해 자본비율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취약차주 및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 비중이 높아 시장금리 상승, 경기 둔화 등 금융경제 여건 악화시 대출자산 부실화로 자본적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¹¹⁾

11) 자세한 내용은 <주요 현안 분석> 「1.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이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참조하기 바란다.

II. 대외지급능력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양호한 상황이나 지난해에 비해서는 다소 저하된 모습을 보였다.

순대외채권은 전년말 대비 감소하였으며,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 비중도 소폭 상승하였다.

외환보유액은 2022년 5월말 4,477.1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154.1억달러 감소하였으며, 2022년 1/4분기말 기준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38.2%로 전년말(35.6%)에 비해 상승하였다(그림 II-1).

그림 II-1. 대외지급능력 지표 변화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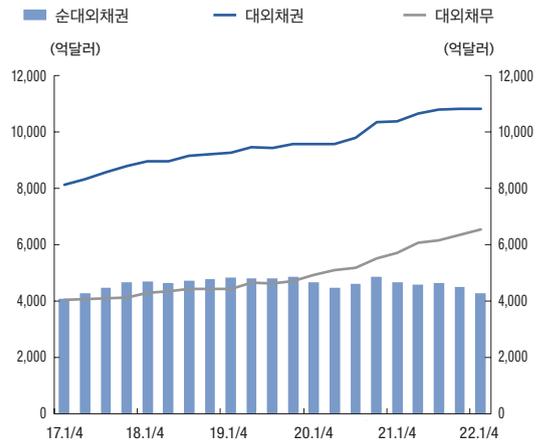


주: 1) 2021년 3/4분기말 대비 2022년 1/4분기말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2) 2021년 11월말 대비 2022년 5월말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자료: 한국은행

순대외채권 감소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2022년 1/4분기말 4,257.5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222억달러 감소하였다(그림 I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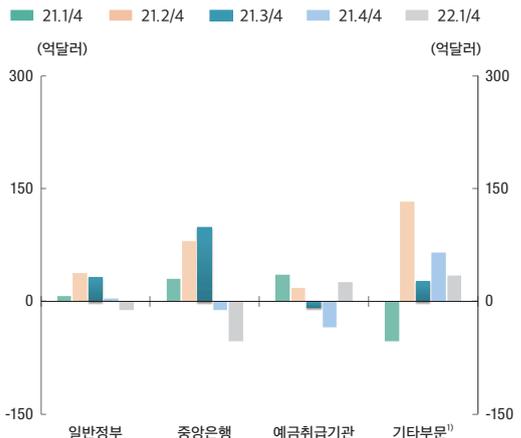
그림 II-2. 순대외채권¹)



주: 1) 분기말 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대외채권은 2022년 1/4분기말 10,798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5억달러 감소하였다. 대외채권 변동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 감소 등으로 53억달러 감소한 반면, 기타부문이 민간기관의 채무상품 직접투자 등으로 35억달러 증가하였고, 예금취급기관과 일반정부는 각각 25억달러 증가, 12억달러 감소하였다(그림 I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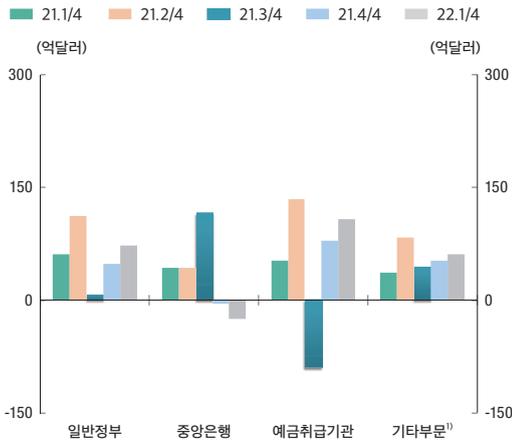
그림 II-3. 부문별 대외채권 증감



주: 1)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의 기타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 등으로 구성
자료: 한국은행

대외채무는 2022년 1/4분기말 6,541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217억달러 증가하였다. 대외채무 변동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예금취급기관이 외화증권발행 등으로 107억달러 증가하였다. 일반정부는 비거주자 원화증권 투자 등으로 72억달러 증가한 반면, 중앙은행은 24억달러 감소하였다. 기타부문은 외화증권발행 등으로 61억달러 증가하였다(그림 II-4).

그림 II-4. 부문별 대외채무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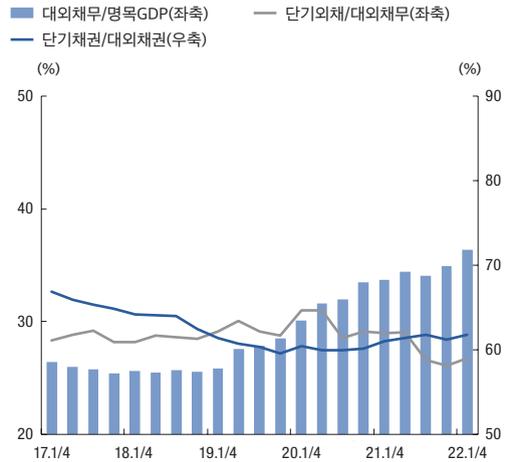


주: 1)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의 기타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 등으로 구성
자료: 한국은행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은 2022년 1/4분기말 36.4%로 전년말(34.9%) 대비 상승하였다.

대외채무중 단기외채 비중은 26.7%로 전년말(26.0%)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대외채권중 단기채권 비중은 61.7%로 전년말(61.1%)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그림 II-5).

그림 II-5. 단기 대외 채무·채권 비중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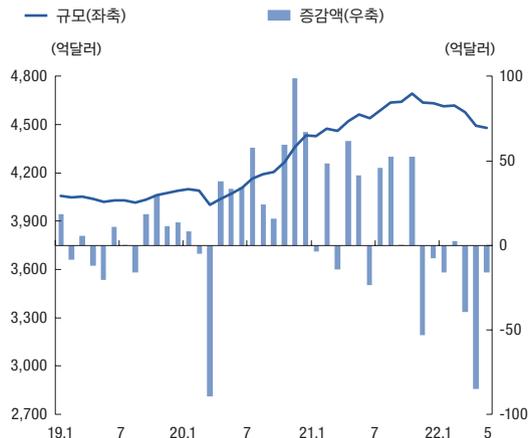


주: 1) 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2021년 10월 이후 감소세 지속

2022년 5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전년말(4,631.2억달러) 대비 154.1억달러 감소한 4,477.1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미달러화 강세에 따른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화 환산액 감소,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에 기인한다(그림 II-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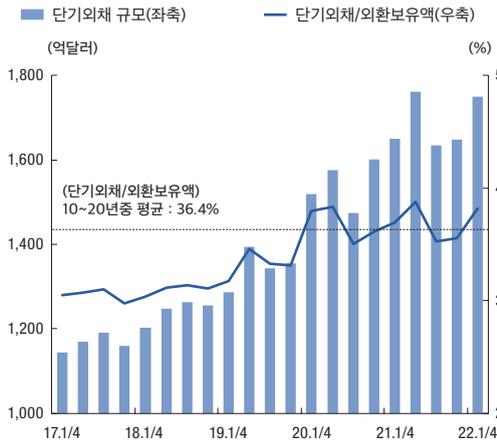
그림 II-6. 외환보유액 규모 및 증감액¹⁾



주: 1) 규모는 월말, 증감액은 월중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편 2022년 1/4분기말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은 38.2%로 전년말(35.6%)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그림 II-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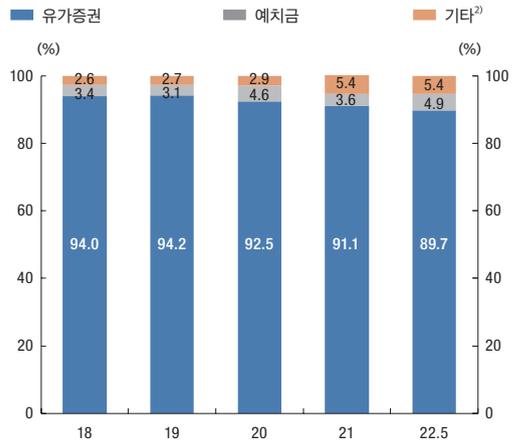
그림 II-7.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¹⁾



주: 1) 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2022년 5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의 구성을 보면 유가증권(89.7%)과 예치금(4.9%)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가증권은 국채, 정부기관채 등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II-8).

그림 II-8. 외환보유액 구성¹⁾



주: 1) 연월말 기준
2) 금, SDR 등
자료: 한국은행

III. 금융시장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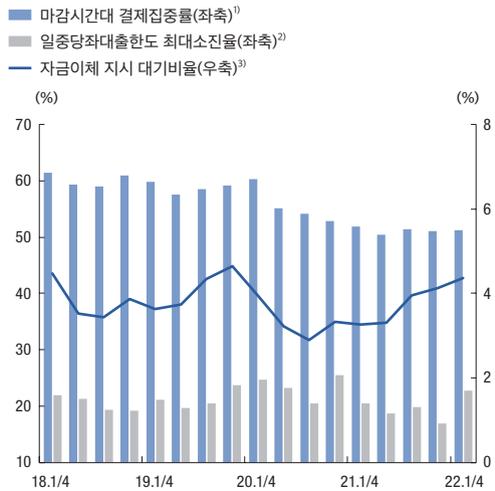
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결제규모는 금융기관의 증권결제, 개인 및 기업의 전자자금이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한은금융망

금융기관 간 채권·채무를 최종 결제하는 한은금융망의 일평균 결제금액은 2022년 1/4분기 중 524.4조원으로 지난해(488.5조원)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관련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확보수준을 나타내는 일중당좌대출한도 최대소진율 및 자금이체 지시 대기비율은 2022년 1/4분기 중 각각 22.8%, 4.4%로 대체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체 결제금액 중 마감시간대(16:00~17:30) 결제 비중은 1/4분기 중 51.2%로 전년동기(51.9%)대비 하락하였다(그림 II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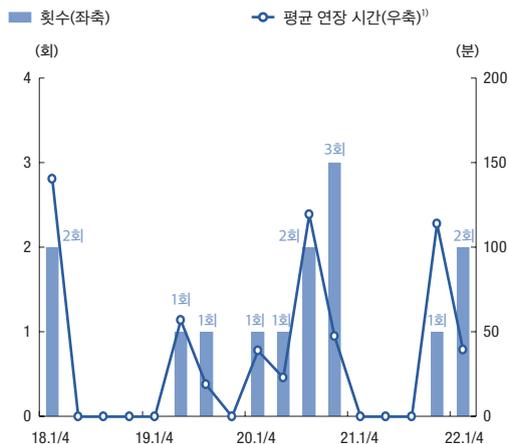
그림 III-1. 한은금융망 관련 리스크 지표



주: 1) 해당 기간중 16시 이후 결제금액/총결제금액
 2) 참가기관들의 일별 일중 순당좌대출 최고사용액/일중당좌대출한도의 평균
 3) 전체 대기금액/총결제금액(결제유동성 절감을 위해 다자간 동시처리되는 거래 제외)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은금융망 마감시각 연장은 2022년 1/4분기 중 2회 발생하였으며, 이는 한국은행 RP매입 입찰실시에 따른 결제 처리, 참가기관의 전산시스템 장애 등에 따른 것이었다(그림 III-2).

그림 III-2.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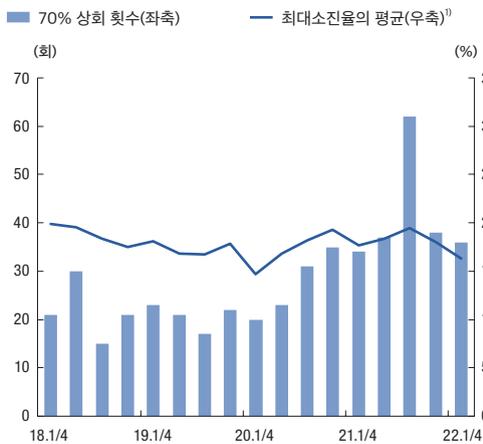
주: 1) 해당 기간 총 연장시간/연장횟수
 자료: 한국은행

소액결제시스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일평균 결제금액은 2022년 1/4분기중 101.5조원으로 개인 및 기업의 전자자금이체 증가¹⁾ 등으로 지난해(94.3조원)보다 크게 늘어난 가운데 관련 결제리스크는 대체로 원활히 관리되었다.

소액결제시스템의 리스크 지표를 보면 차액결제 참가기관들의 순이체한도²⁾ 소진율이 주의 수준(70%)을 상회한 횟수는 1/4분기중 36회로 전년동기(34회)에 비해 2회 증가하였다. 순이체한도 소진율 평균은 2022년 1/4분기중 16.3%로 전년동기(17.7%)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에서 관리되었다(그림 Ⅲ-3).

그림 Ⅲ-3. 순이체한도 소진율



주: 1) 해당 기간중 참가기관들의 일별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증권결제시스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시스템의 결제규모가 확대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동 시스템의 일평균 결제금액은 2022년 1/4분기중 226.8조원으로 기관간 RP, 주식, 채권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221.7조원)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1/4분기중 장내주식, 장내국채 및 장외 주식기관투자자 거래는 모두 기준시한(각각 16:00, 17:00, 16:50) 이전에 결제가 완료되었다(표 Ⅲ-1).

표 Ⅲ-1. 기준시한 이후 증권결제 비중¹⁾

	기준시한 ²⁾	비중(%)				
		2021년				2022년
		1/4	2/4	3/4	4/4	1/4
장내주식	16:00	-	-	-	-	-
장내국채	17:00	-	0.014	-	-	-
장외 주식 기관투자자	16:50	0.0001	-	-	-	-

주: 1) 해당 기간 중 기준시한 이후 결제금액/총결제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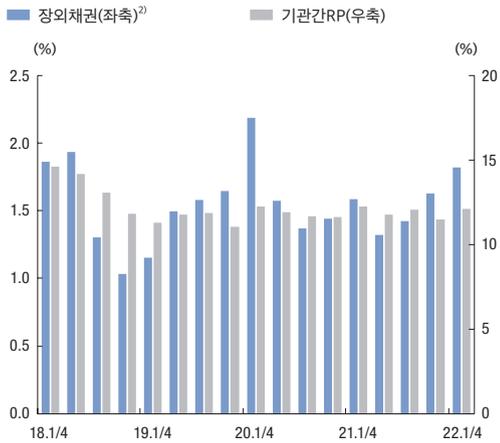
2) 결제지연손해금 부과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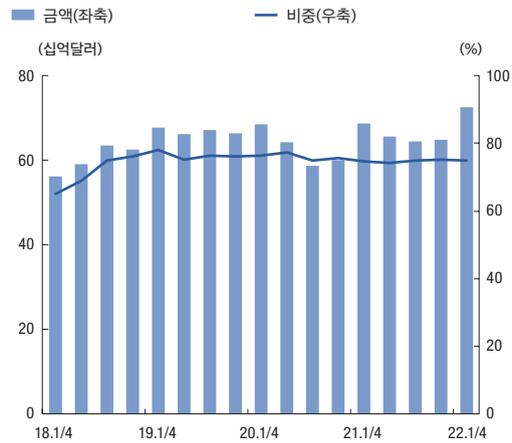
장외채권과 기관간RP 거래의 경우 증권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분리결제의 비중이 2022년 1/4분기중 각각 1.8%, 6.0%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Ⅲ-4).

1)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5>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제공 동향과 리스크 점검」을 참조하기 바란다.

2) CD공동망, 타행한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 소액결제시스템의 경우 수취인에 대한 지급은 즉시 이루어지지않아 이로 인해 발생한 금융기관 간 채권·채무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익영업일 지정시점(오전 11:00)에 결제되므로 금융기관 간 신용공여가 발생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소액결제시스템의 차액결제리스크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참가기관들이 미결제순이체액의 상한, 즉 순이체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III-4. 분리결제 비중¹⁾

주: 1) 전체 결제금액 중 한은금융망(증권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결제금액 비중
 2) 장외채권의 경우 채권, CD, CP, 전자단기사채를 포함(연쇄결제* 차감 후 최종결제 기준)
 * 동일 종목을 매수·매도하는 참가자들이 서로 연쇄적으로 거래함으로써 여러건의 결제가 일방향의 단일건으로 처리되는 결제방식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그림 III-5. CLS시스템 이용 금액¹⁾ 및 비중²⁾

주: 1) 분기중 일평균,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거래분
 2) CLS결제대상 외환거래 중 CLS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비중,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거래분
 자료: 한국은행

외환결제시스템³⁾

CLS은행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CLS 시스템)⁴⁾의 결제액은 2022년 1/4분기중 일평균 725.3억달러로 지난해(658.5억달러)에 비해 증가하였다.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 비중이 2022년 1/4분기중 75.0%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외환거래 관련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III-5).

3) 외환결제는 은행간 환거래 네트워크,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은행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 국내 외화자금이체시스템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결제규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에 중점을 두었다.

4) CLS은행은 외환결제리스크의 근본적 발생 원인이 되는 각 국가간 시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통결제시간대(중부유럽시간 기준 07:00~12:00)에 집중하여 결제를 처리한다. CLS는 동 시간대에 각 통화별 중앙은행에 개설된 결제회원은행과 CLS은행 계좌간 실제 자금이체(자금 납입 및 지급)가 연속적으로 연계되어 결제됨을 의미한다. 현재 미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18개 CLS 결제 통화의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 포함)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참고 5.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제공 동향과 리스크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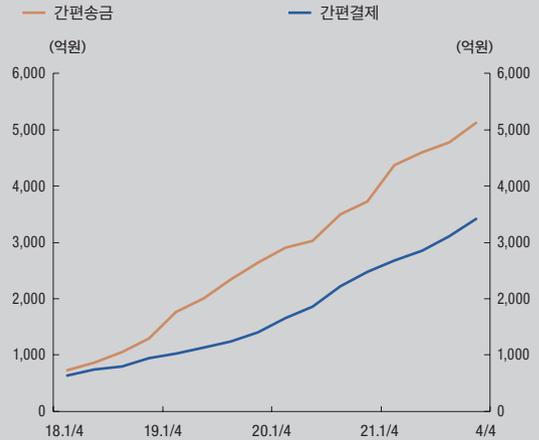
최근 빅테크 등 비금융회사¹⁾가 제공하는 간편결제·간편송금²⁾의 규모가 선불충전금을 기반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비금융회사를 통한 지급서비스 제공 확대 움직임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리스크를 점검해 보았다.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제공 동향

은행이나 카드사가 아닌 비금융회사들은 전자금융거래법³⁾에 따라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하 선불업)이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⁴⁾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인증절차를 간소화⁴⁾한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금융회사들이 제공하는 간편결제 규모는 오픈뱅킹공동망⁵⁾에 대한 빅테크기업 이용제한 폐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2019년 12월부터 증가세가 확대되어 2021년 4/4분기에 일평균

3,412.5억원을 기록했다. 간편송금 규모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4/4분기 일평균 5,130.1억원을 기록했다.

전자금융업자 제공 간편지급 서비스 이용금액¹⁾



주: 1) 일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이용자의 선불금 충전과 환급은 오픈뱅킹공동망을 통해 처리된다. 오픈뱅킹공동망 이용규모는 2021년 12월 중 일평균 469만 건, 1.1조원을 기록하는 등 빅테크기업의 오픈뱅킹공동망 이용 제한이 폐지된 2019년 12월 이후 이용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2)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는 지급카드 등의 중요 정보를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에 미리 등록해두고 거래 시 간편인증수단(비밀번호, 지문 등 생체정보)을 이용하여 재화·서비스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이다. 간편송금(토스 등)은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선불금계정에 미리 충전한 자금을 거래 시 간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수취인의 전화번호 및 선불금계정으로 송금하는 서비스이다.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업은 전자화폐발행업·전자자금이체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결제대금예치업·전자고지결제업으로 분류된다.

4) 「전자금융거래법」 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폐지(15년 3월)되면서, 최초 가입시 1회의 본인인증(ARS, 본인계좌 점유 인증, 공인인증서 등)을 거친 후 간편 인증수단(간편 비밀번호, 지문인식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게 되었다.

5) 오픈뱅킹은 핀테크업체 등이 고객의 명시적 동의하에 오픈 API(여러 곳에 분산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제3자가 편리하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금융회사의 고객정보에 접근하여 지급서비스 및 금융정보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6년 8월에 핀테크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의 형태로 오픈뱅킹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금융결제원이 금융기관들과 핀테크업체들 간의 정보공유 계약 및 시스템 접속을 집중하고 핀테크업체가 요청하는 자금이체를 처리하는 지급결제시스템(오픈뱅킹공동망)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오픈뱅킹공동망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12개 소액결제시스템 중에서 자금이체 건수 기준으로는 전자금융공동망에 이어 2번째, 금액 기준으로는 전자금융공동망, 어음교환시스템 및 타행환공동망에 이어 4번째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선불금 충전 과정 예시



자료: 한국은행

선불기반 지급서비스 이용 증가 및 원인

선불충전금은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간편결제 서비스의 경우 지급수단⁶⁾ 가운데 신용·체크카드의 비중이 최근 하락세를 보인 반면, 선불충전금의 비중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체크카드의 비중은 2018년 1/4분기에 79.9%를 차지하였으나 2021년 4/4분기에는 65.0%로 하락한 반면, 선불충전금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11.6%에서 29.1%로 상승하였다. 한편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은 모두 선불충전금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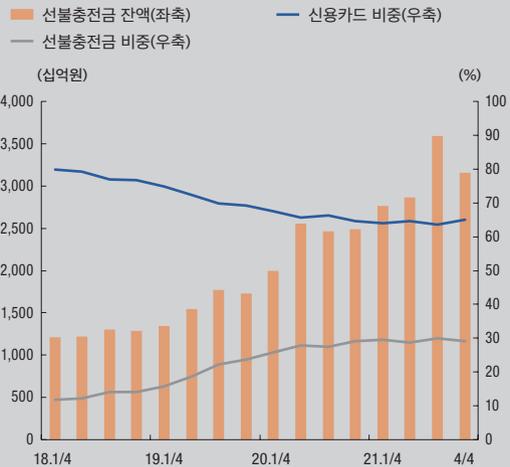
지급수단별 간편결제 이용방식

지급수단	간편결제 이용방식
신용·체크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체크카드 정보를 미리 저장해두고 간편인증을 통해 동 카드를 이용
선불충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전된 선불금으로 대금 지급 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연결된 계좌에서 즉시 충전이 이루어지면서 이용 가능
계좌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계좌 정보를 저장해두고 간편인증을 통해 계좌에서 대금 출금

자료: 한국은행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간편결제·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선불충전금 잔액도 2019년말 1.7조원, 2020년말 2.5조원, 2021년말 3.2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선불충전금 잔액 및 전자금융업자 제공 간편결제 지급수단별 비중¹⁾



주: 1) 일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선불기반 지급서비스 규모가 꾸준히 증가한 것은 선불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선불충전금의 사용이 다른 지급수단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이다. 선불기반 서비스는 이용 과정에서 선불충전금 잔액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잠금효과가 유발된다. 특정 선불

6)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으로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충전금, 계좌이체 등이 있다.

업자에 선불충전금 잔액이 있는 이용자는 다른 선불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기존의 선불충전금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기존 선불업자의 서비스 이용을 지속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신용·체크카드 이용시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수취하는 반면, 선불 기반 결제의 수수료는 전자금융업자가 모두 수취하므로 수수료 측면에서도 선불업자에게 유리하다. 이용자의 관점에서도 선불금을 충전할 때 선불업자들이 충전금의 일정 비율만큼 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타 지급수단에 비해 이점이 있다.

한편 선불충전금을 이용한 간편송금의 증가는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에도 일정 부분 기인한다. 전자금융업자의 간편송금 서비스는 지급인의 선불충전금이 수취인에게 선불충전금 그대로 양도되는 방식(양도 방식)과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바로 환급되는 방식(환급 방식)이 있다. 환급 방식은 지급인의 연계 은행계좌에서 자동 충전되어 수취인의 은행계좌로 바로 환급되는 방식이다. 선불충전금 환급 방식을 통한 간편송금에 대해 더 높은 자본금 규제가 적용되는 전자자금이체업⁷⁾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환급 방식을 통한 간편송금이 전자자금이체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2015년 1월)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자금이체업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 선불업자들이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선불기반 지급서비스 확대에 따른 리스크 점검

빅테크 등 비금융회사의 지급서비스 제공은 지급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기술적 혁신을 유발하여 이용

자의 접근성 확대, 서비스 개선 등을 가져왔다. 그러나 금융회사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비금융회사에 대해 예금자보호법 등이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선불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자금의 100%를, 간편송금을 제공하지 않는 선불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자금의 50%를 외부에 신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선불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화폐기관(Electronic Money Institutions)에 대해 실효성 높은 규제를 적용하여 이용자 자금을 보호하고 있다.

주요국의 전자화폐기관 이용자 자금 보호제도

국가	이용자 자금 보호제도
유럽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자금의 100%를 외부기관 분리예치 또는 지급보증 보험 가입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핀테크 업체가 유동성 및 자본적정성 스트레스 테스트 설계 및 결과를 연 1회 이상 점검·승인받도록 함 ■ 파산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핀테크 업체가 사업중단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자금의 100%(자금이동업) 혹은 50%(선불업)를 공탁, 신탁 또는 지급보증 보험 가입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자금의 100%를 중앙은행에 예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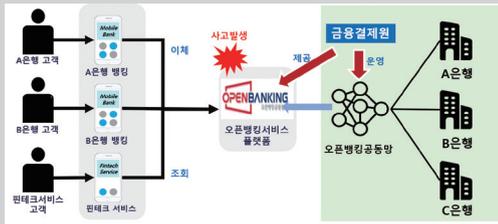
자료: 각국 법률

한편, 오픈뱅킹공동망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해외 주요국 오픈뱅킹의 경우 핀테크 기업이 개별 은행 등에 각각 접속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오픈뱅킹은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공동 플랫폼에 접속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7) 전자자금이체업은 보안카드·OTP 사용의무가 있어 간편인증이 불가능하며, 더 높은 자본금 요건(전자자금이체업: 30억원, 선불업: 20억원) 등 선불업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2022년 5월 기준 등록 업자(선불업자는 73개사)가 전무하다.

구조로 인해 오픈뱅킹공동망은 단일실패점 리스크⁸⁾가 크며, 금융결제원의 플랫폼에 보안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전체 이용기관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한국은행의 권고에 따라 단일실패점 리스크 발생 시 업무가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업무지속계획에 재해복구 훈련 시나리오를 보강하였다.

오픈뱅킹공동망 구조 예시



자료: 한국은행

단일실패점 리스크 외에도 현재 오픈뱅킹공동망 이용 요건에 관련 업⁹⁾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 이외에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는 점도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은 은행처럼 전용회선을 통해 오픈뱅킹공동망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유출, 부정거래 사고 등의 보안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들 핀테크 기업을 경유지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금융결제원 운영 결재망의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지급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등록한 핀테크 업체에 대해서만 오픈뱅킹공동망 이용을 승인하는 방향 등으로 오픈뱅킹공동망 이용제

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선불충전금 한도 확대¹⁰⁾ 및 종합지급결제업¹¹⁾의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혁신과 규제 간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전체 금융 및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들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 자금 보호를 법제화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처리과정에서 야기되는 리스크를 억제하여 금융소비자들의 금융 및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8) 특정기관에 대한 집중도 증가로 인해 해당 기관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전체 시스템의 중단을 야기하는 리스크이다.

9) 전자금융업자 외에도 전자금융보조업자,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등 핀테크산업 분류 업종도 오픈뱅킹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다.

10) 현재 한도는 2008년 7월에 설정된 200만 원으로,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동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11) 정부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형태로, 해당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단일 라이선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의 업무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금융회사만 영위할 수 있었던 계좌 기반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